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사 어떻게 진행되나

1단계 시청~광주역 2023년 개통
2·3단계 순차 착공 2025년 개통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일부 구간 우선 착공은 오는 2025년 개통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호선 1단계 우선착공구간



의 공사를 진행, 오는 2023년에 1단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립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높고,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쳐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광주시가 19일 우선 착공 방침을 밝힌 상무역~월드컵경기장 일부 구간(4.5km)은 차량 혼잡지역인 탓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중 가장 공사가 힘든 지역으로 꼽힌다.

시는 총사업비 2조579억원을 들여 1단계(17.06km·2023년 개통)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정거장 20개소·차량기지 1개소), 2단계(20km·2024년 개통)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점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정거장 18개소), 3단계(4.84km·2025년 개통) 백운광장~진월~효천역(정거장 6개소) 구간으로 나뉘어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발표된 우선 착공 구간은 1단계 구간 중 상무역 인근에서 월드컵경기장 일부 구간이며 공사비는 1500억원이다. 평균 심도는 4.3m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우선 착공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다른 구간

의 공사를 진행, 오는 2023년에 1단계 구간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의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태며, 광주시는 최근 차량시스템을 선정한 뒤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실시설계 용역은 오는 2019년 1월 완료되기 때문에 광주시는 우선 착공 구간의 실시설계를 앞당겨 마칠 방침이다. 우선 착공 구간 실시설계의 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 여부에 따라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첫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대신 '2025년까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울 중대위협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여러 대북 군사 옵션 가운데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옵션도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군사 옵션은 많이 있다. 동맹국들과 협력해 우리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매티스 장관은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발언이 군사 작

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물음에도 “그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며 추가 질문을 차단했다.

비록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 옵션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하기는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통적으로 견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피해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민주주의 위기 부른 정치편향

공수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권력편향과 부패의 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권력만 바라보는 이른바 일부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의 과거 행태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BBK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등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사건에는 대부분 정치 검찰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 4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부 최약의 정치검찰 사건 15선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우병우 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정탁 사건 ▲청와대 관제시위 및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사건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셉템프 사건 등으로,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로 사회논란이 야기됐던 사건들이었다.

이러한 사건 대부분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BBK 사건·국정원 댓글 등 큰 사건마다 정치검찰 관여
보주기 수사 뒤 요직 영전
정치적 보상체계로 악순환

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1기 수사진은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 사이의 금전거래를 사적 금융거래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 새로 꾸려진 2기 수사진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수사 방향은 급선했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저인망식의 장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하루가 멀다하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서거했다.

이 같은 정치 검찰의 수사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품을 제공했

감싸기다.

검찰은 일부이긴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특권적 권한을 활용해 현직 검사 또는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부패나 비위사건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 수사를 왜곡·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에 대한 부패나 비위사건을 축소·무마한 사건은 멀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태대 사건부터 부장검사 친형 세무서장 항응·집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서울중앙지검장 등 돈봉투 만찬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에 먼저 착수한 경우, 경찰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이 직접 처리하고자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다시는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 등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공수처 신설' 등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력자, 정치인, 고위공직자와 검사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정치적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시대적 요구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19일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국민의 바라는 검찰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9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고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두환(68·연수원 12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내건 가치이기도 하고, 한 걸음 나아가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해 개혁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위는 앞으로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oy Tour featuring '무안출발 해외탐방' (Departure from Mu-an Overseas Expedition) with travel packages to Japan, Mu-an, and Daegu/Haeju/Hoian.